2013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6.22 시행)

<출제평>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은 변별력이 문제될 정도로 평이한 수준의 출제였다. 정보화 관련 문제와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 관한 문제(문7,문18)가 약간 까다로웠고 나머지 문제는 평이한 수준의 출제였으며 기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때 강조하였던 문제들(수직적 연결기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 광역행정 방식 등)이 대부분 출제되었다.

– 김 중 규 –

0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규모의 경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
④ 외부효과의 발생

[답] ③ ③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 소득분배의 불공평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0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답] ① 설문은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적재원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동원)정책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	엘리트이론

03.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답] ④ 선례가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은 의제채택 가능성이 높고 선례가 없는 문제들은 의제채택 가능성이 낮다.

04. 킹던(J.W.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답] ①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적 흐름이다.

● 쓰레기통 모형과 흐름창 모형의 요소

쓰레기통 모형의 요소	흐름창(정책창) 모형의 요소
① 문제의 흐름 ② 해결책의 흐름 ③ 선택기회의 흐름 ④ 참여자의 흐름	① 문제의 흐름 ② 정책의 흐름 ③ 정치의 흐름

0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답] ③ ③만 옳다.
① 행정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② 독립규제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조정위원회 – 경제장관조정회의

0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

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답] ②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1/8,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을 감액지급한다.

0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과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답] ④ ④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이다.(국회법 제84조 제6항) ③의 경우 국회는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직접 무효 또는 취소화할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국회법 제84조 제2항)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국회법 84조③항)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84조②항)
④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4조⑥항)

0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 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③ 직위분류제는 ㄱ. 과학적 관리론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0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답] ④ ㉠ 은 조합, ㉡은 협의체, ㉢은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행정협의회에 각각 해당한다. 모두 우리나라 광역행정방식의 일종이다.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④ ㄱ은 지방소비세로 보통세, ㄴ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 ㄷ은 지방소득세로 보통세, ㄹ은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따라서 ㄴ. ㄹ만 목적세이다.

● 지방세목 체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1. 조직관계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답] ④ ④는 수평적 연결조정기제에 해당한다.

●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 (Daft)

수직적 연결기제	수평적 연결기제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④ 수직정보시스템	① 정보시스템 ② 직접접촉 ③ 임시작업단 ④ 프로젝트 매니저 ⑤ 프로젝트 팀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답] ②가 옳다.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답]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수직적·수평적 전문화와 직무의 효과성간의 관계

구분		수평적 전문화[1]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2]	높음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	일선관리업무
	낮음	특수전문가적 직무	전략적 결정

1) 수평적 전문화(수평적 분업) : 과업범위의 세분화 정도로서 한 사람이 한가지의 일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수직적 전문화(수직적 분업) : 과업수행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 (하급자가 권한과 책임 없이 상급자 가 결정한 방법대로 과업을 반복하는 경우는 수직적 분업화가 높은 경우이다.)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답] ①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화관	안정 지향, 폐쇄적	변화 지향, 개방체제적
초점	하급관리자	최고관리층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나 통제	영감과 비전제시·공유에 의한 동기유발
이념	능률지향	적응지향
조직구조	기술구조(기술위주)	경계작용적 구조(환경과 연계작용)
관련 조직	기계적 관료제, 합리적 구조에 적합	단순구조나 임시조직 등 탈관료적·유기적 구조에 적합

<정리> 변혁적 리더십에 적합한 조직 조건

(1) 적응성의 강조 : 변혁적 리더십은 능률지향보다는 적응지향이 더 강조되는 조직에 적합하다. 그리고 창의적 모험을 지지하는 조직문화에 적합하다.

(2) 경계작용적 구조의 중시 : 변혁적 리더십은 기술구조보다 경계작용적 구조(boundary-spanning units)가 더 지배적인 조직에 적합하다. 여기서 기술구조란 기술을 운용하여 투입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경계작용적 구조는 조직과 그 환경의 연계작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3) 단순구조 · 임시체제의 특성 :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 전문적 관료제 ·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와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4) 통합형 관리전략 : 변혁적 리더십은 시장적 교환관계나 관료적 통제보다는 개인적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통합시키는 관리전략에 의해 공동목표성취를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조직에 더 적합하다.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답] ④ 케이든(G.E.Caiden)이 말하는 이른바 제도적 부패는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부패가 제도화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Caiden, 1977: 306-308)

제도적 부패의 상황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조직은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공식적 행동 규범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나, 이러한 공식적 행동 규범의 위반을 조장, 방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 행동 규범을 고수하는 구성원이 제재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부패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복을 당하며, 부패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갖가지 위협을 가하여 침묵시킨다.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 부패의 유형

거래형 부패	뇌물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 (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일탈형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 주기 (개인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문화화.관행화된 체제적 부패, 집단부패)
권력형 부패	정치인이나 상층부 관료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작은 부패 (tiny corruption)
백색부패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흑색부패	악의가 있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 가능한 부패)
회색부패	사회에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패)

1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답] ② ②만 가입대상이다.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이 가입대상이며 ④의 경우 현업관서 기능직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9.1)
구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 가능 ·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미만의 외무공무원 ·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단, 체신 등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 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기능	·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통제

구분		예	중앙통제		
			예방적 통제	사후적 통제	
				합목적성	합법성
고유사무		·자치단체 존립유지사무 (조례규칙제정 등) ·주민복지사무(상하수, 소방[1], 시장, 도서관, 학교, 병원, 도로, 주택,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X	X	O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보건소,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직업안정,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등	X	O	O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 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대통령 선거, 여권발급	O	O	O

1) 소방사무는 원래 자치사무였으나, 소방사무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20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소방에 관한 기획과 예산은 국가사무가 되고 지역단위의 화재진압이나 구난·구조·구급사무만 자치사무로 남게 되어 소방사무가 이원화된다.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답] ③ ③은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관이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이지만 어디까지나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방식이다.

●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효용과 단점

(1) 기대효과
①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③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과다요구하고 중앙예산기관에서는 이를 대폭 삭감하는 관행(악순환) 제거
④ 지출한도를 통합하여 정해주므로 각 부처가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고 애쓰게 하는 유인(편법)을 줄여준다
⑤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2) 한계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②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③ 재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④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답]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집단의사결정방법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토의기법(두뇌선풍기법), 비판금지, 질보다 양 중시
전통적 델파이	익명의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정리하는 설문조사 기법, 대면적 토의 없음
정책델파이	델파이를 정책분석에 응용(다양한 참여자, 선택적 익명성, 갈등의 조성, 양극화된 통계처리 등이 전통적 델파

	이와 차이)
교차영향분석	연관된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확률 추정
실현가능성분석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분석
역사적 유추	과거의 유사한 문제 등과의 유추(시네틱스)에 의한 예측
명목집단기법	대안제시→제한된 집단토론→표결(컴퓨터 표결시 전자적 회의기법이 됨)
변증법적 토론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도출하는 지명반론자기법, 악마의 주장법